

광주 첫 반려동물 복지시설 영산강 공원에 조성한다

문화교육센터·산책로·야외 훈련장·놀이터 등 2028년 완공 펫카페·샤워실...시, 지자체와 협의 거쳐 3곳 추가 조성키로

광주에서 최초로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이 영산강변에 조성된다.

광주시민 5명 중 1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는 반려동물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종합복지시설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는 서구 영산강대상공원(덕흥동 829번지 일대)에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민선8기 공약인 반려동물 복지 지원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복지 지원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반려동물공원(2만 4055㎡)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공모 및 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7년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공원에는 문화 교육센터(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연면적 2000㎡), 잔디광장 및 산책로(6500㎡), 야외 훈련장(1500㎡), 동물 놀이터(3000㎡) 등이 들어선다.

문화 교육센터에는 입양 교육, 동물보호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세미나실 뿐 아니라 동물 행동 교육실과 실내 놀이터 등이 마련된다. 또 펫 카페, 펫 샤워실 등의 수익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잔디광장과 산책로는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돛자리 펴고 피크닉 등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야외 훈련장에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교감·소통 및 유대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어질리티(장애물 달리기) 등 야외 훈련 및 체험교육이 가능한 시설이 갖춰진다.

동물 놀이터는 대형, 중·소형 놀이터가 조성되며, 이곳에서는 현행법상 반려견에게 필수적인 목줄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려동물공원이 설치된 지역은 대전, 경북 의성군, 서울(마포·구로·동대문 센터), 순천시, 오산시 등이 있지만 광주시에서는 처음이라는 것이 광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광주지역 반려인은 140만 인구 중 29만여 명

(21%)에 달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2019년 4만여 마리에서 지난해 기준 8만여 마리로, 5년 새 2배 증가한 것이 반려동물공원 조성의 이유다.

이외에도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도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광주 내 3곳의 반려동물 놀이터(3000㎡)를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유기동물의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짓고 있는 광주시 광역동물보호 센터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 광역동물보호 센터가 완공되면 그동안 민간 위탁을 하던 동물보호소를 광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한다. 기존 동물보호소는 리모델링을 통해 유기되는 고양이 보호시설로 활용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유기 동물 입양 시 1년 동안 펫 보험 가입비 전액(15만 원, 1차례)을 지원하는 사업과 입양 초기 의료비 지원(25만 원, 1차례) 활성화 등을 통해 유기 동물 입양문화 확산에 노력한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에 내장 칩을 등록할 경우 기존 3만 원의 지원금을 4만 원으로 늘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9일 광주시 북구 직원들이 10일부터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4만명에게 지급될 10만원의 지역화폐인 상생카드를 검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병가 과도한 제한은 직원 건강·휴식권 침해”

인권위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 안돼도 허용해야”

회사에서 병가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직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A기관 원장에게 병가 사용과 관련해 소속 직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A기관 소속 직원은 “지난해 A기관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한 ‘병가·질병휴직사용 가이드’가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이드에서는 직무수행 외의 병가 사용은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정 감염병 및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결국 진정한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A기관은 이에 대해 “직무수행 외의 병가는 오남용 우려가 있고, 기관 전체의 업무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는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법

정 감염병과 그에 준하는 질병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진정인의 신경·정신과적 질환은 출근이 불가능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므로, 병가 대신 개인 연차나 체력 단련휴가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기관이 직원들의 병가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위축하는 행위는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원 병가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질병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 질병이나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병가를 사용할 만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동구, 금남로1가 공영주차장 10월 중 개방

18면 1시간 요금 1400원

광주시 동구가 금남로1가 입구에 설치된 임시 공영주차장을 오는 10월 중 개방한다.

광주시 동구는 9일 총장로1~3가 상인회와 ‘금남로1가 입구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위탁 협약을 맺고 준비를 거쳐 10월 중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주차면수는 총 18면이며 주차요금은 1시간 1400원, 하루 최대 8000원 수준으로 계획됐다. 월권은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동구는 올해 초 수협중앙회와 부지사용 계약을 맺고 2년 동안 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

하기로 했다. 주차장은 총장로 1~3가 상인회가 위탁받아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동구는 당초 지난 4월부터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민간 주차장 사업자의 반발 등으로 개방이 미뤄졌다.

동구는 오는 10월 중 총장로축제를 마친 뒤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고 차단기 등 추가 시설물을 설치해 개방할 방침이다.

입택 동구청장은 “이번 주차장 관리위탁으로 인해 총장로 방문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협약이 총장로 상권 활성화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벌초 나선 50대 남성 사망

추석을 앞두고 벌초에 나선 50대 광주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서부경찰은 9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금당산에서 북구 공무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자녀로부터 “혼자서 조상 묘를 벌초하러 간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금당산 일대를 수색하다 A씨를 발견했다.

A씨에게서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벌초 작업을 하고 그늘에서 휴식하던 중 지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 북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광주시 북구가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층 생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나선다.

광주시 북구는 10일부터 북구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광주 상생카드)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40억원 규모로 북구가 앞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 긴급 재정 기조에 맞춰 각종 경비 감액, 신규 사업의 일몰제와 격년제를 통해 마련한 금액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저소득 북구 지역민들의 생계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소비를 유도에 소상공인 내수활성화까지 꾀하겠다는 취지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올해 8월 15일 기준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단 기준일에 북구에 주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타 지자체로 주소로 옮긴 전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북구는 집중 지급 기간(9월 10일~14일)을 운영해 추석 연휴 전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원금을 수령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이 저소득 이웃과 소상공인에게 민생의 시름을 덜어줄 단비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美 하원, 2024년 6월 25일 '파룬궁 보호법' 만장일치 통과



▲ '파룬궁 보호법'을 발의한 스콧 페리 의원

▶ 하원 표결 동영상 

◎ 美 의회, “파룬궁은 전통 수련법”

2024년 6월 25일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파룬궁 보호법' (Falun Gong Protection Act, H.R.4132)은 25년간 지속된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을 종식 시키기 위한 것이다.

“파룬궁은 ‘진(真)·선(善)·인(忍)’을 기본 원칙으로 한 불가(佛家)의 전통 수련법으로, 리홍쯔(李洪志) 선생에 의해 중국에서 처음 소개됐으며, 가부작 등 연공과 도덕 향상을 위한 수련을 통해 심신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룬궁 보호법」 中

◎ 美 동맹국, 공동 제재 나선다

“수년간 중국 전역에서 강제 장기적출이 대규모로 자행됐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은 장기 공급원 중 하나였다.” —「파룬궁 보호법」 中

파룬궁 탄압 가담자:

- 자산 동결, 입국 금지(기존 비자 취소)
- 20년 이하 징역형과 100만 달러 이하 벌금형